



金明子
(숙명여대 교수)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현장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교육의
하부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며
수준높은 여성공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기존의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불식돼야 하며 사회적 지원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여성인력은 활용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세기말의 사회변동은 정보사회라는 산업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이행하는 문명사적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혁신의 변동기에서 그것을 잘 이용한 나라 또는 문화권이 선진으로 발돋움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과학기술 개발 투자는 최근 몇년사이 상승곡선의 둔화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실정은 임계규모를 크게 밟돌던 추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 허(虛)를 보하고 실(實)을 지키는 전략 수립과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면 기술도약으로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인력수급정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차별 42개국중 41위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듯 교육열이 뜨겁다. 그 탓에, 여성 취학률 27위/130개국, 대학교육의 여성 비율 43위/127개국이면서도, 정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47%)은 선진국 수준(60%)에 크게 못미치는 59위/127개국, 행정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12위/116개국으로 처져있다. 그것도 중졸 이하의 취업이 가장 높고, 부문별로는 생산직 23%, 사무직 14%, 판매·서비스직 18%, 전문관리직 10% 이하이다. 스위스 IMD(국제경영연구소)-WEF(세계경제포럼)의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차별을 41위/42개국으로 매겼고,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한국의 여성세력지수(Gender Empowerment Index)를 90위/116개국으로 매겼다.

한마디로 여성들은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좋은 자리’에서는 밀려나 단순기능·저생산성 부문에 치우쳐 있는 고질적 성분질(性分節)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 상당히 공평하리라는 일반적(?) 인상과는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돼 있다. 예컨대 대학교수 인력(전문대 전임강사 이상)의 성비(性比)에서 여성의 전체 평균은 14%이나, 과학기술분야 여(女)교수 비율은 이에 크게 못미친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D/B’(94년 현재,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전공 17개 가운데 여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기초의학 및 약학’과 ‘농수산’에서 각각 10.8%, 10.6%일뿐, 다음으로 생물과학 9.6%(1백13명), 화학 6.2%(69명), 수학 5.6%(65명) 정도이다.

공학부문 여성비율 2~3%

예상대로 공학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욱 떨어져, 건축공학·화학공학·컴퓨터과학·지구과학 및 자원공학에서 2~3% 정도이고, 나머지 5개분야에서는 1%도 못미친다. 국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보다 더 낮다. 기초과학분야 학사인력 양성에서 여성비가 현재 40%를 웃돌고 있음을 볼 때 고급인력으로의 진출이 저조하기 짹이 없다. 출연연구소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나을 턱이 없다. 대덕연구단지 여성 고급 인력(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 선임급 이

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정보 센터 94년 D/B은 생명과학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9.5%, 다음 정보전자통신 3.8%, 소재공정 3.0%, 환경지구과학 2.5%이고, 기계설비 및 에너지·자원·원자력에서는 1% 수준으로 있으나 마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기술 현장에서 여성비가 절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어찌 한두가지이겠는가? 전통적인 여성인력 양성의 제도적·현실적 취약성, 여성 스스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이 분야를 기피함으로써 특히 고급학위로의 진출이 저조한 것, 그간 그나마 배출된 인력조차도 남녀차별의 사회적 관행과 편향된 시각에 의해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 등등.

그러나 자생적으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94년 현재 재학중인 전체 여학생의 비율(서울대 공대 3.6%(4천4백70명 중 1백62명), 과학기술대학 11.9%(2천4백95명 중 2백98명), 포항공대 13.8%(1천1백80명 중 1백63명))만 보아도 상당히 높아졌다(85년도 전국 공대 여학생 비율 2.7%, 90년도 6.1%) 산업현장에서의 여성인력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어, 양적으로 산업체 여성근로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으려니와 여성지배직종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80년 13개 직종, 90년 말 25종).

여성예비군의 현역화 시급

본질적으로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면서도 사회적 해결의 노력이 미흡했고, 남녀 공통의 문제이면서도 여성만이 부등권 안은 채 별 진전이 없었던 것, 그리하여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던 것이 그간 여성문제였다. 세상은 멀미날 정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여성의 일'

은 여지껏 그랬으니 그런대로 살아보자고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기술혁신에 따르는 사회변동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끔 몰아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보기술혁명은 기술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사회 모든 분야를 속속들이 바꾸고 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이른바 3F(Feminine, Feeling, Fiction)시대가 되어, 여성 인력의 위상이 종전의 사회·노동시장 구조에서보다 훨씬 유리해지리라 점쳐진다. 근육을 쓰는 대신 섬세하고 정밀한 일손과 컴퓨터 작업으로 바뀌고 있는 과학기술 현장이 여성의 적성에 맞고, 잠재능력 발휘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여성과 과학기술의 사이는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이 결정적 시기에 여성 인력의 예비군(豫備軍)을 현역화하여 산업 발전에 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의식의 선진화와 평등사회 실현의 이상(理想)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로 고민했던 선진국들은 자연적인 개선 추세에 맡기기에는 현황이 너무 다급하다는 인식 아래 한시적 적극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일종의 충격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과학·공학과 여성'의 문제도 중요할 수 밖에 없어, 예컨대 미국은 1990년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OSEP(Office of Scientific & Engineering Personnel) 내에 '과학·공학여성인력위원회' (Committee on Women in Science & Engineering)를 설치하여, 여성인력 양성 체계의 혁신을 위한 하부구조 개혁, 인력의 자질향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부합되는 일(career

pattern)의 다양화와 그 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해 지속적·체계적 연구와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자신도 먼저 달라져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발전 정책이 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은 한차례 여성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를 성공의 기회로 삼느냐 여부는 여성들 자신의 보다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에 달려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위낙 역사가 일천하여 그 나름의 훈련경험으로 탄탄한 전통을 형성하기에는 못미쳤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조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한다.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종전의 진출구조상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쪽으로 방향타가 잡혀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여성인력의 공급 측면에서는 여성 교육의 하부구조 강화·개편이 따라야 한다. 새로운 체제로 공학인력 수요의 급증에 비추어 수준 높은 여성 공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여자대학내 공대 신설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전문대의 교육개혁도 현재의 수준보다 격상시킨 테크니션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력 양성체계(미국의 1980년대 중급테크니션 양성 '2+2 모델'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명무실해진 여자상업고등학교는 공업교과 및 컴퓨터관련 정보기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차별 관행이 불식되고, 실제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